

###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가닥 잡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의 밑그림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각급기관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재난안전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의 유형별 문제점 및 향후 계획, 재난에 대한 선진외국의 대응사례 등도 함께 소개한다.

내용에 따르면 안전관리 분야는 안전관리 및 안전기술 기준 제도와, 선진 안전문화 정착 등의 방안이 소개됐고, 재난관리 분야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구성, 재난홍보 시스템 강화,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의 체계적 복구를 위한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소방역량 강화 분야는 특수화재진압체계 개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시스템 고도화 등 총 52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재난의 유형별·단계별 개선대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 39개 법령 43건에 이르는 유사중복 법령을 조기에 정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노동부 고용과 화합의 새로운 MI 발표



노동부의 MI(Ministry Identity)가 새롭게 바뀌었다.

노동부는 "일자리 나누기, 노사화합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문제의 주무부처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확립하고 각오를 다지기 위해 부처 상징을 새롭게 바꿨다."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새로운 MI는 두 사람이 어우러져 알파벳 'e'를 만드는 형상이다. '노와 사' 그리고 국민의 화합을 통해 신명나게 일자리(Employment)를 만들고 경제(Economy)의 원동력이 됨을 상징한다.

또한 인터넷 및 디지털(Electronic)을 의미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노동부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과천청사 본부에서 현판식을 개최, 새 MI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노동부의 MI는 새롭게 재작된 것으로 게시되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가 모든 국정과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용과 화합을 상징하는 새 MI를 통해 일자리 주무부처로서의 비전과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월 산업현장 '재해자는 줄고, 사망자는 늘고'

올해 첫 달의 산업현장에서 재해자는 줄어든 반면 사망자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산업재해자수는 총 6,94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의 8,202명보다 15.4%(1,260명)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 재해자수는 제조업 2,420명, 건설업 1,474명, 운수창고통신업 377명, 광업 88명, 전기가스상수도업 12명, 기타산업 2,571명 등으로 집계됐다. 세부 업종별로 볼 때는 제조업의 경우 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등 제조업(400명), 기계기구제조업(379명), 화학제품제조업(235명) 순이었으며, 기타산업은 음식 및 숙박업 등 기타의 각종사업(1,609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280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173명) 순이었다.

재해자를 사업장 규모로 분석해보면 5인 미만 2,480명, 5~49인 3,068명, 50~99인 448명, 100~299인 503명, 300~999인 230명, 1000인 이상 213명 등으로 5~49인 사업장(제조업 1,191명, 기타산업 1,083명)에서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45~49세가 1,05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1월 사고성 사망자수는 117명이다. 질병 사망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6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사망자 수(138명)에 비해 21.7%가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질병 사망자수 포함)를 업종별로 보면 광업 31명, 제조업 41명, 전기가스상수도업 1명, 건설업 48명, 운수창고통신업 20명, 기타산업 27명 등으로, 건설업의 사망자가 전체의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50명, 5~49인 60명, 50~99인 11명, 100인~299인 24명, 300인~999명 15명, 1,000인 이상 8명 등으로 5~49인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서울청에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서울청은 건설업(17명), 부산청은 제조업(15명), 대구청은 광업(6명)·제조업(6명), 경인청은 운수창고통신업(11명), 광주청은 제조업(6명)·건설업(6명), 대전청은 광업(7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청의 경우 전폐 사망자가 16명으로, 전폐로 인한 전체 사망자(27명)의 약 59.3%를 차지했다.



아울러 사고성 사망자수를 분석해보면 건설업(47명, 40.2%), 5~49인 사업장(60명, 51.3%), 65세 이상 근로자(22명, 18.8%), 추락재해(41명, 35.0%) 등의 비율이 높았다. 질병 사망자(51명)의 경우는 광업(27명)에서, 그 중에서도 석탄광업(26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용직 근로자 10만 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오는 6월부터 건설업의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10만 명에게 산업안전 교육과 도면보기 교육, 기능 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3월 11일 새벽 양천구 신정사거리의 새벽인력시장을 방문, 대기 중인 건설 노동자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산업안전교육은 1일 프로그램으로 9만 명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다.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실업급여 수급자, 지방관서의 일일취업센터나 일일취업안내소의 구직자 등이 우선 선발된다.

또한 5,000명의 건설 근로자들에게는 미장이나 도배, 도장, 타일, 용접, 보일러, 배관 등의 분야에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교육은 1일 6시간씩 현장 직무를 중심으로 20일 가량 진행될 계획이다.

도면보기 교육은 5,000명을 대상으로 1일 6시간씩 5일 과정으로 이뤄지며, 구조물 설계부터 시작해 시공과정 전반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하는 날에 운영되며, 참가한 근로자에게는 식대와 1일 교통비 1만5000원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한 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사업을 위탁, 6월~12월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정부가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근로자의 기대에는 미흡한 줄 안다"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도면보기교육과 기능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교육이력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취업도 알선할 계획이다.

###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계산대 의자 설치 완료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지난달 직원들의 건강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전국 점포에 계산대 의자 설치를 완료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까지 111개 점포에 모두 2220개의 계산대 의자(사진)를 비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센텀시티, 부천 여월점 등 6개 점포에 계산대 의자를 시범 설치한 바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의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위원회(KOSHA)의 심사기준에 합격한 인체공학적 제품으로, 한국여성 표준 신체 치수 및 좌판경사 등에 맞춰 제작됐다.

회사 측은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계산대 의자가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건강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 타 경쟁사들도 계산대 의자 설치를 확대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또 계산대 의자 외에 푸드코트와 행사매장의 계산대에도 의자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롯데마트 측도 지난달 16일 대덕점과 당진점을 마지막으로 전국 63개 모든 점포에 계산대 의자 1,230개의 설치를 완료했다.

### 전국 산업현장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실시

노동부(장관 이영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산업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하여 전국 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에 따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199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총 조사대상은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중 12만개소이다. 이 중 2004년도에 이어 5인 이상 제조업체는 전수조사(10만 개소)로, 5인미만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는 각 1만 개소씩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전문가를 통해서 방문 조사된다.

특히 이번 일제조사는 그간 포함되지 않았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 등 종합관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유해·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비제조업 30개 업종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산업현장의 소음·분진 발생 등 유해 작업 8종에 대한 현황, 위험기계·설비 18종의 보유현황, 유해 화학물질 70종의 취급현황, 근무형태 및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에 대한 사항이다.

조사 결과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함께 통합 DB로 구축된다. 그럴 경우 개별사업장의 작업환경 유해정도,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직업병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해진다. ☺